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563호 2020. 6. 30.(화)

조례·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3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폐지규정-----	4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여행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4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6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7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76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를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 또는 실·단·과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 내용 삭제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사항 개정(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국장, 예산 부서의 장, 성별

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 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부터 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따른다.

◆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업무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제도화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6조)
-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영구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지원대상자 주소 :</p> <p>지원대상자의 관계 :</p> <p>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p> <p>년 월 일</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p> <p>*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p>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p> <p><input type="radio"/>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할 경우</p> <p><input type="radio"/>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p>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p>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radio"/>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p> <p>※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p> <p><input type="radio"/> 목 적: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p> <p><input type="radio"/>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영구 거주기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p> <p><input type="radio"/>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p> <p>신청자 본인은 구청장이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신청인은 위 유의사항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illegible]

◆ 제안이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라. 수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7조)
- 마. 장려금 환수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가.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호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호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안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동일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태료 금액’ 개정(별표 2)

- 위반행위 1호의 과태료 금액 “가”와 “나”의 “2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
- 위반행위 2호의 과태료 금액 “가”와 “나”의 “2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25조제2항 및 제4항 관련)”을 “(제2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제25조)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에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제2호 중 “헌신적인 봉사로서”를 “헌신적으로 봉사하여”로 한다.

제9조 중 “포상은”을 “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사무처리”를 “사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의 “사기 양양”을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자어 정비 및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제5조)

- 1) 한자어인 “양양”을 “드높이는” 으로 수정
- 2)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
 -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상위 법령 관계 조항 수정 및 제목에 맞는 조문으로 이동(제9~10조, 제12조)

다. 그 외 어색한 표현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장애인, 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및 역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주간돌봄,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4. 학생, 일반 구민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6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제1조 ~ 제3조)
-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제4조 ~ 제10조)
-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 제12조)
- 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정·지원 및 역할(제13조 ~ 제14조)
- 마. 협력체계 구축, 의견청취, 비밀 준수의 의무(제15조 ~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원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타 기관 공무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5. 구정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청사관리 용역업체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 시에 사전 무인정산기 및 출구에서 정산한다.

제6조(주차장 수입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미출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① 무료개방시간 이후 관리자는 미출차 차량에 대하여 다음날 09:00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③ 차량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5.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무료개방시간 이용 주차차량은 다음날 08:00까지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제3조 관련)

구 분	운영시간	주차요금
평일	09:00 ~ 18:00	10분마다 300원
	18:40 ~ 다음 날 08:00	무료
토 · 공휴일	09:00 ~ 18:00	2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18:00 ~ 다음 날 08:00	무료
1일 주차	09:00 ~ 18:00	8,000원

[별지 제1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72시간 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무단 방치 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차장영수증

월

일

첨 부 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담당자	계 장	과 장	결
			재

.....절

.....취

.....선

이 동 명 령 서

(No.)

아래 차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 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월 일 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현행 관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 나. 주차장 관리방법,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 ~ 제6조)
- 다. 미출차 및 방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제7조)
- 라.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제8조)
- 마. 주차장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허용오차”란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 $\pm 5\%$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허용오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별표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폐지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정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폐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여행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여행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여행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여행업무 규정”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출장업무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국외여행 또는 국외파견에”를 “공무 국외출장에”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실·과·단,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

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여행자”를 “국외출장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여행방침”을 “출장 방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행계획의 변경신청”을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여행계획”을 “출장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같은 항 중 “해외여행”을 “해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여행출발”을 “출장출발”로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 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제8조제1항 중 “7명”을 “감사 부서의 장을 포함한 8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허가업무담당주사”를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외부 위촉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2.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여행 대상자인”을 “국외출장 대상자인”으로, “국외여행 대상자일”을 “국외출장 대상자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심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목적지”를 “출장목적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제11조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을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으로, “여행자수칙”을 “출장자 수칙”으로, “해외여행”을 “해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해외여행”을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을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허가부서장이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

하고,”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로,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 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 시 귀국 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 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5.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본인은 공무원국외출장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제안이유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및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작성례 시달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객관성 확보 및 책임성·투명성 강화.

◆ 주요내용

가. “여행”관련 제명 및 명칭을 “출장”으로 변경

나. 규정의 적용범위 명시(제2조)

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기간 변경(제3조)

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대상 구체화(제7조)

마.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사항 및 임기 명시(제8조)

바. 외부위원 참석 시 수당지급 근거 명시(제9조)

사. 결과보고서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 및 기한 명시(제13조)

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허가 관리대장 비치 신설(제14조)

자.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조항 신설(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수영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업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각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를 의사로 두거나 위탁한 경우는 제외)를 둔다.

③ 구청장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청장은 노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각 사업장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법 제16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건관리자)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서의 장 등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자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4.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다.

제16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담당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6.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물·기계·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표지)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부착장소, 색채 등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1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방호조치)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한다.

제24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기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27조(작업환경 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9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건기준)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 사고-관리감독자, 직업병-보건관리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를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⑦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⑧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무재해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제36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적용범위(제2조)
-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제4조~제6조)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9조~제14조)
- 라.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대상(제15조~제16조)
-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방호조치 등 안전관리(제17조~제26조)
- 바. 근로자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제27조~제31조)
- 사. 사고조사 및 보고, 재해분석 및 대책(제32조~제3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3.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 90일 이내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녀가 있는 공무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중 “30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제13조)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확대(제20조)
-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도입(제28조)
- 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보장 확대(제3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자녀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임산부의 보호 등)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 및 유산
· 사산에 따른 보호 휴가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 태아검진 시간
의 허용, 육아시간,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장제3절(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및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제9조)
-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공서의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제26조)
-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도입(제28조)
- 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 사항 삭제 및 규정 정비(제30조 ~ 제36조)